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8773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0.

발 의 자 : 조계원 · 박지원 · 김문수
박용갑 · 박희승 · 윤준병
박해철 · 주철현 · 임오경
문금주 · 위성곤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, 금품 및 향응 수수 혹은 또는 공금의 횡령 등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줄여서 지급하고 있음.

그런데 공무원이 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2분의 1이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,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및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여금의 총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4항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 및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퇴직급여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) ① ~ ③ (생 략) ④ 재직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 제2편제1장(내란의 죄), 제2장(외환의 죄),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(반란의 죄), 제2장(이적의 죄), 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는 제외한다)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<u>경우에는</u>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| 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 및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에는</u> ----- -----. |